

광주, 전국 첫 '기업탄소액션' 온실가스 5559t 감축

작년 24개 기업 5.3% 줄여...당초 목표 2배 초과 해태제과·세방 등 8개사 신규 참여 32개사 활동 2030년까지 배출량 11% 감축기로...전국 모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탄소액션' 사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5559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기준 배출량 대비 2% 감축을 크게 상회한 5.3% 규모로, 기업탄소액션 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시는 올해 중·중견기업 8개사가 새로 합류함으로써 총 32개 기업과 탄소중립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업탄소액션'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중·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

동에 참여하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구축한 거래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을 모으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중·중견기업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 및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참여 기업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대비 11%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탄소액션에 8개 기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32개 기업이 탄소중립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신규 참여기업은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세방리튬배터리㈜, ㈜엘탑, 디스커버믹스테크매뉴팩처링㈜, 기광산업㈜, ㈜엘텍정보기술, ㈜아이시스, 제일산업㈜광주공장 등 8개사다.

광주시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감축을 돕기 위해 전문가 기술

상담(컨설팅),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협약식과 함께 '2025년도 우수기업 시상식'을 진행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참여 기업 24개사는 기준배출량 대비 5.3% (5559t)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당초 목표 감축량(2%)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다.

시상식에서는 각각 온실가스 34.9%의 감축률을 기록한 ㈜파바나인과 ㈜태봉, 26.5%를 감축한 ㈜씨피코리아 등 3개 기

업이 광주광역시장 표창과 함께 '탄소중립 우수기업 인증 현판'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활발한 탄소배출권 모으기래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기업탄소액션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자체가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아왔다"며 "참여기업들의 자발적 실천이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집중안전점검 실시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최근 첨단3지구 부지조성 공사장과 광산구 비아육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구조 안전성과 관리 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도, 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내달 말까지 70만원 지급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는 지난 2~3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은 거주와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

는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6월 말까지 경영체당 7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1차 지급은 지난 4월 21만40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498억원 (도비 599억원·시군비 899억원)이 지급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악취 개선 위해 SRF시설 가동 중지

내달 30일까지...시설 개선 위한 운영사 측 요청 수용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이 오는 6월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SRF제조시설의 설비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위해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가동 중지를 요청하자 광주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SRF제조시설이 악취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했다.

시는 가동 중지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했으며,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SRF제조시설 악취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시·구의 읍면이 가동 중지를 요청하자 광주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정빛고을㈜은 지난해 SRF제조시설이 악취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했다.

시는 가동 중지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광산을 보선 민주 전략공천...야권은 독주견제

▶1면에서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을 검증한 후보군을 앞세워 광주·전남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는 전체 27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10곳 안팎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현직 입력 후보와 전직 김성환 후보 간 재대결이 성사됐고, 단양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재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목포는 당선 무효 이후 재도전에 나선 박홍률 후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며, 여수에서는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진도와 강진도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통합교육감 선거 역시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대중 예비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가 이정선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중도 성향 후보 간 세 결집이 이뤄졌다.

여기에 장관급·정승급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구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예비후보의 카지노 출신 사실이 공개되며 선거가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후보 개인 이슈가 교육감 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면서 선거 열기를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향과 지역 기반을 갖춘 복수 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 요구도 제기되며 공천 방식이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진보당 전준원 전 광주시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안태욱 전 시장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도 후보 선정을 진행 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지역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이탈 여부가 맞물리면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내 첨단 3지구 도시가스 형평성 논란

시·도 행정구역 따라 각종 요금 적용...장성 입주민 더 비싸

통합시 행정구역 일원화...기초단체 연계 개발시 민원 우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 3지구'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된 단일 택지지구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구역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이 산정된 때문이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주와 전남으로 구분된 행정구역이 특별시로 일원화되는 만큼, 기초단체 간 연계 개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주식회사 광주첨단3지구에프비이 등에 따르면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 약 362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다.

총 7878가구·2만명 규모의 주택과 상업·교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A1블록(힐스테이트 첨단센터) 1520가구, A2블록(첨단제일풍경채) 1845가구, A5블록(첨단지 일풍경채) 584가구 등 총 39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가구에 취사용 연료로 공급될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과 시설 부담금 등이 단가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일 택지지구내 조성돼 같은 가스가 공급되더라도 행정구역상 광주지역인 A5블록에 비해 장성지역의 A1·A2블록 입주자들이 더 비싼 값에 가스를 공급받는 구조가 된 때문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각 광역자치체별로 독립적인 원가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및 시설부담금이 산정되고 있다.

장성지역의 도시가스 기본요금 870원/MJ, 광주는 750원/MJ으로 책정돼 장성

지역이 광주지역보다 80원 가량 더 비싸다.

주택 취사용 단가도 장성은 24원, 광주는 22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취사전용시설 부담금도 35만5300원과 12만3662원이 적용된다.

첨단 3지구 입주 세대 당 가스시설 부담금은 장성지역인 A1과 A2블록은 각각 95만3252원, 95만987원이다. 이는 광주 지역인 A5는 38만463원으로 단가 차이가 약 2.5배에 이른다.

반면, 이들 단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주 관로는 광주지역 인프라망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져, 단일 택지지구내 '같은 가스 다른 요금'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계다가 다음달 A7·A8블록에서 805가구(첨단3지구 호반씨티), 오는 7월에는 A6블록 638가구(첨단3지구 제일풍경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기능 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구가 결합된 복합도시로 조성되는 만큼, 국립실내환경센터, 파인데이터 센터, 기타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 입주가

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 크다.

광주첨단3지구에프비이 관계자는 "첨단 3지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하나의 단일 택지구"라며 "행정구역상 일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급 현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통합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인 해양에너지측도 난처한 입장이다.

광역단체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다 임의로 개별 공급 규정을 선택해 적용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행정구역상 전남지역인 사업지에 대해 광주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7월 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역단체의 제도정비 등 장치가 마련될 경우 유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2·29 여객기참사 장기 방치...공무원 12명 문책

정부 점검결과 발표...“항철위 매뉴얼 위반”

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합점검단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책 요구 대상은 항철위 소속 6명, 국토부 4명, 경찰과 소방 각 1명씩이다.

점검단은 참사 직후 소방과 경찰이 주도한 현장 수색·수습이 매뉴얼 없이 이뤄졌으며 경험 없는 인력도 다수 투입되는 등 부실하게 실시됐다고 판단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작년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은 전남경찰청이 맡았는데,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항철위는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형 자루에 담아 장기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뉴얼상 의무 사항을 다수 어겼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